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문요약

분단 반세기 이상 상이한 정치·경제·사회체제로 지속되어 왔던 남북한의 제도와 인식을 하나로 묶어내는 한반도 통일 과정은 필연적으로 통일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통일을 위한 이러한 거래비용은 남북한 차원에서 새로운 한반도 정치공동체를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유무형의 내적 거래비용과 한반도 통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과들의 외적 거래비용이 그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 과정 및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내적 거래비용보다 외적 거래비용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역학관계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현상타파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을 계획, 준비하고 통일과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적 거래비용이라는 통일 비용의 주요 쟁점들을 시론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적 거래비용이란 통일 과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북아 역내 주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와 한국이 이들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통일과정을 보다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유무형의 거래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외적 거래비용에 초점을 두고 향후 한반도 통일 및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주요 쟁점들이나 항목들을 제시하여 우리의 외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주제어: 거래비용,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 한미동맹, 영토 및 역사문제, 국가 정체성

I. 서론

민족의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첫째, 오천년 한민족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역사적·민족적 정체성의 복원 및 확립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에너지와 자원의 결합으로 통일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고 북방 거점 확보를 통해 인접 지역인 중국, 몽골,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륙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명실공히 통일 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역내 및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위상을 확보하는 근원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기본적으로 냉전으로 분단된 남과 북을 하나의 정치공동체로 통합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정점으로 펼쳐지는 동북아 국제관계에서의 지정학적 지각변동이기도 하다. 즉,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의 근원적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국 모두가 이해상관자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국가들에게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한반도 통일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른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이해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우리의 외교적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한편, 분단 반세기 이상 상이한 정치·경제·사회체제로 지속되어 왔던 남북한의 제도와 인식을 하나로 묶어내는 한반도 통일 과정은 필연적으로 통일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통일을 위한 이러한 거래비용은 남북한 차원에서 새로운 한반도 정치공동체를 창출하는 데 소요되는 유무형의 내적 거래비용과 한반도 통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과들의 거래비용이 그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 과정 및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내적 거래비용보다 외적 거래비용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역학관계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현상타파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관련,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한반도 통일 시기 및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 새로운 한반도의 지역적·국제적 위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요컨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는 사고와 인식의 지평을 넓혀 외적 거래비용의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이에 대한 지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을 계획, 준비하고 통일과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주변 국가들과의 거래비용이라는 외적 통일 비용의 주요 쟁점들을 시론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적 통일비용이란 한반도 통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동북아 역내 주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와 한국이 이들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통일과정을 보다 원만하게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유무형의 거래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외적 통일비용에 초점을 두고 향후 한반도 통일 및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거래비용의 주요 쟁점들이나 항목들을 제시하여 우리의 외적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글의 논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사적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계약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래비용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외적 거래비용 측면에서 독일 통일의 외교안보적 거래비용의 경험을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가 거래비용경제학의 계약이론을 여기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 과정에 있어서 주변 국가들과의 통일 한국에 대한 합의 역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제3절에서는 한반도 통일 관련 외적 거래비용의 문제로 여기에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불가피하게 현안 쟁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는데 소요되는 외적 거래비용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통일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러시아와 일본과의 외적 거래비용 문제는 여기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수반되는 외적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통일 한국의 국가 정체성 문제, 통일협력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정리함과 아울러 본 논문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거래비용과 독일 통일

1. 거래비용의 주요 특징

국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외정책의 수단으로서 외교는 고전적인 정책수단이자 다양한 외교적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 중의 하나이다. 외교를 통해 관련 국가들 간에 체결

되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합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행위 주체 간의 계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적 경제영역에서의 거래나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들 간의 외교관계도 명시적·묵시적으로 조건들을 구체화한 계약이나 합의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들 간의 다양한 외교적 합의는 거래비용경제학 관점에서는 하나의 계약에 해당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적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크게 고전적 혹은 완전 계약, 불완전 계약, 그리고 관계 계약으로 구분된다.¹⁾ 고전적 계약은 주로 낮은 거래비용을 초래하는 서비스에 가장 적합하지만, 불완전 계약과 관계 계약은 높은 거래빈도, 높은 자산특수성, 그리고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공급 과정에서 연속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²⁾ 이런 점에서 사적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규정하는 다양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완전 계약이 아닌 불완전계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공급단위와 생산단위의 관계가 완전한 계약에 근거한다면 공급자와 생산자 간의 관계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완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감내할 수 없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완전 계약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완전 계약이론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이들 간의 관계

1) Ian R. Macneil, "Contracts: Adjustments of Long-term Economic Relations under Classical, Neoclassical, and Relational Contract Law,"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vol. 72, no. 6 (1978), pp. 854-905; Elliott D. Sclar, *You Don't Always Get What You Pay For: The Economics of Privatiz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2) 김재훈,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3호 (2005), pp. 205-228.

를 적절하게 설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접근법이다.³⁾

불완전한 관계적 계약에서 계약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화 혹은 서비스 자체의 가격과 계약내용의 결정뿐만 아니라 계약내용의 실현을 위한 감시활동을 펴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래비용이 중요하다. 관계적 계약이론을 발전시킨 윌리엄슨(Oliver E. Williamson)에 의하면,⁴⁾ 거래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불확실성으로 이는 일반적 불확실성과 행태적 불확실성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불확실성은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기인한 것으로 완전한 정보의 부재와 조직의 성과 측정상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행태적 불확실성은 인간의 편의주의(opportunism)에 기인하는 것으로 상대 계약 당사자에 대한 신뢰의 부재를 의미한다. 편의주의는 계약관계의 여건이 변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의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 불확실성은 주로 거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행태적 불확실성은 거래 당사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 특징은 모든 거래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관계의 성격을 차별화시키는 핵심적 요인은 거래의 환경적 특징이다.

이러한 거래비용의 논거를 외교안보 영역에 적용했을 경우, 역시 제일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가 바로 외교관계에서 상대방의 행태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이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사국과 통일에 대해

3) 김성배, “불완전 계약이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의 거버넌스 비교연구,” 『제도과 경제』 제2권 1호 (2008), p. 229.

4) Oliver E. Williamson, “Transaction-Cost Economics: The 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2, no. 2 (1979), pp. 233~261; Oliver E. Williamson,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가들 간의 거래비용은 통일 상황과 그에 수반되는 특정 쟁점영역에서의 불확실성 문제로 해당 당사국들은 각자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편의주의에 입각한 행태적 불확실성을 보일 개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외교관계가 아닌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일의 당사국은 통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국가들의 편의주의적 행태 영역을 좁혀 나가면서 통일에 따른 외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독일 통일의 외교안보적 거래비용

1990년 10월 3일에 이루어진 독일 통일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었다. 독일 통일은 1989년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안보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독일 통일의 내적 과정에 있어서 동독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가속화된 결정적인 시기가 1989년 5월 7일에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였다면⁵⁾,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독일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독의 국경시설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냉전과 전후 질서의 종말을 상징했기 때문이었다.⁶⁾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계기로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통일 과정에서의 외적비용은 크게 통일 독일의 지역적·국제적 성격 및 위상과 직결된 외교안보 영역에 집중되었다. 우선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서독은

5)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서울: 통일부 통일정책실, 2011), p. 10.

6) 임중현 외 역, 『독일통일백서』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9), p. 19.

통일을 위한 외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1945년의 포츠담 협정과 1952년 서방연합국과 서독 사이의 독일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전승국의 '유보권'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하였다. 이에 서독은 한편으로는 동독과의 물밑접촉을 진행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통일과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소련·프랑스·영국과 1990년 2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친 '2+4 회담'을 진행시켜 나갔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던 '2+4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외적 통일 비용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통일 독일의 국경선 문제와 통일 이후의 안보정책에 관한 문제였다. 먼저, 국경선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1937년 12월 31일 독일제국 국경 안에 포함되어 있던 오데르-나이세 동쪽 지역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과정에 있어서 통일 독일의 국경선은 "통일 독일의 국경은 동독과 서독의 국경이며, 이 조약이 발효되는 날 최종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규정된 1970년 8월 12일 서독과 소련 간에 체결된 모스크바 조약 제1조의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2+4 회담'에서 폴란드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1990년 11월 14일에 체결된 국경추인조약을 통해 통일 독일과 폴란드 간의 국제법상 구속력있는 조약으로 합의되었다.⁷⁾

다음으로 통일 독일의 안보정책과 관련해서는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2+4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서명된 「독일 관련 사항을 마무리 짓는 규정에 관한 조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외적 거래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첫째, 독일은 서방동맹국들의 유보권 해소에 대한 반대급부로 독일 안보정책의 활동영역을 제한하는데 동의하였다. 둘째, '2+4 회담'에

7) 위의 책, p. 273.

서 독일은 이전에 선언한 핵·생화학무기생산 포기를 다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무기는 소유하지도, 개발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했다. 셋째, 1990년 7월에 있었던 서독 콜 총리와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코카서스 회담에서 합의한 연방방위군 병력을 37만 명으로 제한하는데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헌법과 유엔 헌장에 일치되지 않는다면 독일은 재래식 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⁸⁾

한편, 독일 통일의 외적 비용과 관련해서 유럽연합(EU)과의 관계도 중요하였다. 독일 통일 과정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 있었다. 하나는 전범국 독일의 특수 지위에 따른 문제이자 독일의 국토 규모,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 잠재력, 과거의 역사적 경험 등으로 유럽 대륙의 세력 분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일 통일은 단순한 국내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2+4 회담'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적 문제라는 점이다. 또 다른 명분으로는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의 구조적 연계성의 문제이다. 독일 통일은 동독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한다는 형식적 절차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 없고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정치적·경제적 힘의 배분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사안이었다. 통일 과정에 있어서 유럽공동체는 동독 주민들과 기업들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고, 통일로 인해 통합된 거대 독일시장이 마련되어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될 수 있었고, 독일 통일이 유럽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코 부담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럽공동체의 입장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⁹⁾

8) 위의 책, p. 215.

9) 통일부,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pp. 646~649. 독일 통일에 있어서 유럽공동체가 행한 역할은 크게 ① 분단 독일의 상황 ② 1989년 가을 기점 ③ 1990년 통일 과정 ④ 1990년 통일 독일의 유럽연합 편입이라는

III. 한반도 통일에서의 외적 거래비용 문제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외교안보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처리 문제를 포함한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의 양적·질적 문제이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유엔사 해체 문제, 한미동맹의 역할과 위상 문제, 주한미군의 주둔지 제한 문제, 그리고 동북아 평화안보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의 영토 및 역사문제이다.

물론, 이들 문제 이외에도 통일 관련 북한의 대외관계 승계 문제가 외적 거래비용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할 것이다. 즉,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북한의 지위, 조약 승계, 북한의 국제기구 관련 지위 승계, 대외채권·채무 문제, 북한의 양허권 처리 문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 군사안보 문제 등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 한미동맹, 그리고 통일 한국의 국경 및 역사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들 문제들은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 일뿐만 아니라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통일 한국에 대한 공식적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1.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 문제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 문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두될 수 있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책, pp. 651~660.

는 문제가 바로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 문제이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 문제는 통일 비용의 내적·외적 거래비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내적 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 문제는 북한 인민군의 과거 청산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국방력 재창설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 문제는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에 있어서 주변 국가들의 군사안보적 이해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은 기본적으로 군사력의 양적 팽창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군사적 반경이 보다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변 국가들에게 통일 한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통일 한국 자체가 군사적 증강으로 인식되어 역내 군비증강 및 안보 딜레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독일 통일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반도 통일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들은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에 대해 예의주시할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외교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 주변 국가들이 예의주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가 바로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문제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 있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처리 방향 및 이의 해결 여부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사활적 안보이해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북한 핵 문제는 통일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정치

¹⁰⁾ 통일 이후 남북한 군통합에 관한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손기웅, “통일 이후 남북한 군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2004), pp. 123~147.

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외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 및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즉,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 측면에 있어서 적어도 통일 한국은 비핵정책의 내구성 확보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문제에서 정치적 의도와 기술적 능력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 북핵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핵물질 및 핵능력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핵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과거 구소련의 핵무기와 핵시설 해체를 지원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에 대한 지역적·국제적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통일 과정에서 침예하게 등장할 핵문제에 대한 지역적·국제적 의구심과 우려감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¹⁾

2. 한미동맹 문제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에 있어서 한미동맹 문제는 무엇보다도 통일의 당사자인 한국, 한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 그리고 통일 한국으로 인한 현상변경에 민감한 중국 모두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매우 중요하고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통일 한국, 미국, 중국 3자의 안보적 역학관계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한미동맹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정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침예하고 해결하기 난해한

1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에 대해서는 전성훈,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쟁점중의 하나가 바로 한미동맹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통일 한국의 한반도는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다하더라도 통일 한국은 여전히 동북아 정치에서 파생되는 안보 딜레마의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역사적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동북아 역내 강대국 정치에 따른 지정학적 요소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 한국은 통일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통적 지정학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요컨대, 한반도 통일은 남북 분단을 극복한 통일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명예와 강대국 정치의 전략적 경쟁 무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¹²⁾

미국 역시 한반도 통일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에 따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트루먼 행정부 이후 한국에 유리한 조건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 왔다.¹³⁾ 그러나 미국은 통일 한국의 동맹정책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통일 한국이 동북아 강대국인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항일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통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며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고 지역 안보전략구도를 미국 중심의 구도로 유지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이다.¹⁴⁾

12) 진징이, “한반도 통일과 중국,” 『한겨레』, 2012년 6월 19일; <<http://www.hani.co.kr/popups/print.hani?ksn=538533>>.

13) 『조선일보』, 2012년 10월 12일; <<http://news.chosun.com/svc/news/www/printContent.html?type=>>.

한편, 국내 일각에서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중국의 입장¹⁵⁾에서도 통일 한국과 한미동맹은 중국에게 가장 핵심적 안보이익의 문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통일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기보다는 한반도 통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주변 정세의 불안 증대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약화 또는 상실에 대한 우려에 있다.¹⁶⁾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과정에 있어서 중국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한미동맹의 해체나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통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한반도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쟁점화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반도 통일의 외적 비용과 관련된 한미동맹에 대한 통일 한국, 미국,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재정리하면 한국은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강대국 정치에 따른 안보 딜레마에 대한 우려감, 미국은 통일 한국이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한 중국 경도로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수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국은 전략적 완충지대의 상실과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미국의 대중 견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3자 간의 공통분모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대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작용할 수도

14) 고봉준, “통일 한국과 미국: 편익과 우려해소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의 준비』(2012년 9월 20일 청주대학교 통일학술회의 발표문), pp. 33~34.

15)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는 근거로는 첫째, 통일 한국이 중국의 위협세력으로 등장, 둘째, 전략적 완충지대의 상실, 셋째, 영토분쟁이 일어날 때 불리, 넷째, 통일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부상 등이다.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209241716412117&type=1&gubn=und...>)

16) 전성홍 · 이중화 편,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8), p. 250.

있을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의 외적 비용과 관련,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중시하는 가운데 중국의 안보적 우려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일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다만, 중국의 안보적 우려감을 최소화하고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통일 한국에서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즉, 통일 한국에서 한미동맹은 특정 강대국의 군사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으며, 단지 역내 평화와 안정의 담보자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한미동맹은 지금의 주둔형 동맹유형(alliance types)에서 정치형 동맹유형으로 전환하여 통일 한국과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 간에는 최소한의 정치적 협의체나 혹은 참모진의 소통을 통해 상시적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¹⁷⁾ 이에 따라 대다수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최소한의 병력만을 한강 이남에 배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하면서도 동북아 역내 강대국정치의 안보 딜레마를 제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즉, 통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은 한미동맹의 해체와 동시에 3자 모두와 다른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¹⁸⁾ 이 방안은 통일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17) 동맹유형이란 동맹 회원 국가들이 유무형의 군사적 안보자산을 공유하는 정도와 종류, 안보자산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흐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태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맹유형은 동맹 형성의 목적과도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맹의 성격과 기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 이론·역사·쟁점』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2), pp. 72~76.

18)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이수형,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통일과평화』, 2호 (2009), pp. 34~62.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다만, 이 방안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중 간의 신뢰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작동하고 있는 동북아 동맹정치에 대한 혁신적 사고의 전환과 실천적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영토 및 역사문제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수락하기 힘든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통일 한국의 영토 및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역사문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한반도 분단 이전의 역사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 차원을 넘어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의 과거 청산 문제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통일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통일 한국과 중국 간의 국경선 및 역사문제로 한정하고자 한다. 물론, 북한과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북한의 대외관계 승계문제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현재 및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한중 간에 첨예한 이해관계로 작동하는 영토 및 역사문제가 바로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2003년 고구려사 왜곡내용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격렬한 역사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기본적으로 중국 내의 국민적(민족적)·영토적 통합을 강화하고 한반도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며 자국의 정통성과 기득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방어적이지만¹⁹⁾ 한국사의 혼이라 할

19) 문대근, 『한반도 통일과 중국: 과거·현재·미래의 한중관계』 (서울: 늘봄플러

수 있는 고조선과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장래 한반도의 명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²⁰⁾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공정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역사왜곡문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배달민족의 총체적 역사체계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공정에 따른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는 한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타협과 양보 불가능’한 오천년 한민족의 근원적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유도하고 영토 및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영토와 역사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은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국경선으로서 과거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적 영토뿐만 아니라 1909년 일본과 청에 의해 체결된 간도협약에 따른 간도의 영유권 문제를 통일 이후 재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의 영토를 고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은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특히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고구려 역사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중국의 올바른 역사관 재정립을 얻어내는 것이다.

스, 2010), pp. 358~59.

²⁰⁾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동북공정의 경과, 쟁점과 한국의 대응』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p. vii.

IV. 한반도 통일에서의 외적 거래비용 최소화 방안

1. 통일 한국의 국가 정체성 제시

지난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듯이,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남북 분단국가가 하나의 정치적 독립체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독일 통일과 마찬가지로 오천년 한민족의 역사를 복원하여 역사적·민족적 정체성을 복원·확립하는 작업인 동시에 동북아 역학관계에서의 근본적 세력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 통일은 세계적 차원에서 이미 종식된 냉전의 완전한 청산이자 19세기 구한말의 동북아 국제정치로의 회귀라는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통일은 통일의 당사국인 남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역내 및 주변 국가들 모두에게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차대하고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통일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내적 통합을 완수해야 하는 통일 이후의 과제뿐만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가 또 다시 주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의 장이 되어 불행했던 역사의 기억이 재현되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역사적 책무가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국가 정체성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고 통일 이후 동북아 역내에서의 강대국 정치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모두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체성은 어느 한 국가의 이익과 행동 기준의 지표로 삼는 특성과 특질의 집합으로 국가가 처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인식,

그리고 규범과 가치에 해당하는 자의식에 의해 역사적으로 자신을 타자와 차별화하는 준거이다. 국제관계에서 국가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 나라의 국격(國格)과 관련된 것으로 특정 국가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다른 국가들의 태도에 따라 그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나 위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 정체성의 하위 영역으로서 대외전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국가의 안보 정체성이다. 안보 정체성이란 국제무대에서 안보 행위자로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조직하고 정의하며, 대외정책과 관련된 목표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국가의 안보 정체성은 국제관계에서 그 국가의 존재 이유, 현재적 좌표와 위상, 그리고 국가의 대외적 방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 국가의 대외적 행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안보 정체성은 그 국가의 지정학적 환경, 물리적 힘, 다른 국가와의 상대적 역량이라는 객관적 조건과 특정 시기 국제안보체제의 속성(성격과 특징)과 국가 지도자의 가치체계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²¹⁾

통일 한국의 국가 정체성은 변화된 대외환경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 통일 한국의 국제적 좌표와 위상 정립 및 그에 부합하는 역할 설정, 그리고 외교안보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결정과 이들 간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담보해 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통일 한국은 지난날 고통과 아픔의 지정학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지정학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국가 정체성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 한국의 국가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역내 주변국 모두의 안보적 우려감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으면서도 역내 평화

21) 이수형, “중추적 중견국가와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전략 모색: 가교전략과 헤징전략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7권 제2호 (2011), pp. 239~240.

와 안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비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통일 한국의 국가 정체성으로 가장 부합하는 것이 중추적 중견국가(pivotal middle power)의 모습이다. 중추적 중견국가란 기본적으로 중견국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가운데²²⁾ 그 국가의 지정학적 맥락이 전략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특정 국가가 위치해 있는 지정학의 전략적 측면이 강대국이나 주변 국가들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²³⁾ 특히, 통일 한국은 객관적 조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추적 중견국가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중용의 안보 정체성(security identity of mean)을 기반으로 통일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내 강대국 정치에서 파생될 수 있는 안보 딜레마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를 평화와 번영의 지정학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통일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국내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 한국의 중립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정치의 역사에서 특정 국가가 중립국의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가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통일 한국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중립국의 위상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중견국가로서의 통일 한국은 지정학적 가치로 인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는 관여와 개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

22) 중견국가 개념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는 김치옥,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pp. 7~36.

23) 미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중추국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Robert Chase, Emily Hill and Paul Kennedy, “Pivotal States and US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5, no. 1 (1996), p. 37.

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한국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의 부산물로 나타나는 중립국의 위상보다는 우리의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중추국가의 위상을 확보하여 그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통일 한국의 미래에 부합할 것이다.

2. 통일 협력을 위한 지역적·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6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의 적폐(積弊)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여 평화적으로 통일 한반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 나아가 국제적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역내 주변 국가들과의 지역적·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반도 통일이라는 국가적 대업을 원만하게 완수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외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적 통일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통일전략은 첫째, 남북한의 한반도 차원, 둘째, 한반도 통일의 이해상관자인 동북아 역내 차원, 셋째, 국제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 차원에서의 통일전략은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의 점진적·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구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동북아 강대국의 동맹정치에 편입되어 있어 남북한의 안보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대국 동맹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남북한이 한반도 정치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가시적으로 입증시켜 나갈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정책 방향과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공통적 입장을 도출해 내야만 할 것이다.²⁴⁾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은 동북아 정치의 핵심변수인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반도 정치관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면서 통일의 발판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통일 전략의 동북아 차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미중관계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도 국제정치적 핵심 변수로 부상한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 한반도 정치의 상위의 결정적 행위자로서 우리의 통일전략에서 외적 거래비용의 가장 핵심적 이해당사국들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통일 과정의 진행과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의 최소화 차원에서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또한 미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국과 남북한이 어떠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지가 핵심적인 방향 설정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 전략 차원에서 한국은 앞에서 언급한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인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 한미동맹, 그리고 통일 한국의 영토 및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의 양자적 협력관계와 더불어 한국, 미국, 중국의 삼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²⁵⁾

마지막으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통일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용한 외교적 대상으로 유엔(UN)을 들 수 있다. 유엔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국가들의 협력체일 뿐만 아니라 한국전

24) 이수형, “남북한 한반도 정치와 강대국 동맹정치 간의 연계성 분석,”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이론』 (서울: 논형, 2012), p. 165.

25)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협력유도 방안과 미중관계에 따른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창수,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협력유도 방안,” 최진욱 외,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47~69; 김태현, “미중관계의 전망과 한반도 통일,” 최진욱 외,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71~91.

쟁을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적 차원의 통일전략에서 유엔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통일전략 차원에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에 한국의 평화유지활동군의 일정 부분을 위탁하여 유엔의 지역적·국제적 평화유지 활동에 지속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 통일 및 통일 이후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넓혀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 걸친 한국의 통일전략은 상호 밀접한 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통일전략은 하나의 통합된 체제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 가운데 미중관계의 동북아 차원이 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출발점이자 최종점은 남북관계의 한반도 차원이지만, 동북아의 미중관계는 한반도 통일과정의 촉매 또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관계를 통일 협력을 위한 지역적·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축에 놓고 남북한의 한반도 관계를 주된 동력으로 통일 협력의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관계는 미중관계의 변수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면서 미중관계를 통일의 촉매 요소로 전환시킬 수 있는 통일의 동력이 되어야만 한다.

V. 결론

이 글의 목적은 서론에서 밝혔듯이,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반도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은 무엇보다도 통일 한국의 종합적 군사력, 한미동맹의 변화 문제, 그리고 통일 한국의 영토 및 역사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의 원만한 과정을 구축하고 외적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은 당시의 불확실한 상황에 따른 역내 주변 국가들의 편의주의적 행태에 좌우되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러한 역내 국가들의 편의주의적 행태 영역을 좁혀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통일 협력을 위한 지역적·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편의주의적 행태를 제어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핵심적인 것은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를 통해 이를 지속적인 통일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가 통일의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우리 주도의 한반도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내 주변 국가들의 편의주의적 행태를 제어하여 통일의 외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 접수: 2012년 10월 28일 / 수정: 2012년 12월 3일 / 게재확장: 2012년 12월 3일

【참고문헌】

국문

- 고봉준. “통일 한국과 미국: 편익과 우려해소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의 준비』(2012년 9월 20일 청주대학교 통일학술회의 발표문).
- 김성배. “불완전 계약이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의 거버넌스 비교연구.” 『제도와 경제』, 제2권 1호 (2008).
- 김재훈. “민간위탁의 계약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거래비용경제학 및 신제도이론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3호 (2005).
- 김창수.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협력유도 방안.” 최진욱 외.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 김태현. “미중관계의 전망과 한반도 통일.” 최진욱 외.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동북공정의 경과, 쟁점과 한국의 대응』.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 문대근. 『한반도 통일과 중국: 과거·현재·미래의 한중관계』. 서울: 늘품플러스, 2010.
- 손기웅. “통일 이후 남북한 군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2004).
- 임종현 외 역. 『독일통일백서』.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9.
- 이수형. 『북대서양조약기구: 이론·역사·쟁점』.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2.
- 이수형. “남북한 한반도 정치와 강대국 동맹정치 간의 연계성 분석.”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이론』. 서울: 논형, 2012.
- 이수형. “중추적 중견국가와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전략 모색: 가교전략과 헤징 전략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7권 제2호 (2011년).
- 이수형.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통일과평화』, 2호 (2009), pp. 34-62.
- 전성훈.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서울: 통일연구원, 2002.

전성홍 · 이종화 편. 『중국의 부상, 동아시아 및 한중관계에의 함의』.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8.

진징이. “한반도 통일과 중국.” 『한겨레』, 2012년 6월 19일; <<http://www.hani.co.kr/print.hani?ksn=538533>>

통일부. 『독일의 통일 · 통합 정책연구: 제1권 분야별 연구』. 서울: 통일부 통일정책실, 2011.

영문

Chase, Robert, Emily Hill and Paul Kennedy. “Pivotal States and US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5, no. 1 (1996), pp. 33~51.

Macneil, Ian R. “Contracts: Adjustments of Long-term Economic Relations under Classical, Neoclassical, and Relational Contract Law.”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vol. 72, no. 6 (1978), pp. 854~905.

Scar, Elliott D. *You Don't Always Get What You Pay For: The Economics of Privatiz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Williamson, Oliver E.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Williamson, Oliver E. “Transaction-Cost Economics: The 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2, no. 2 (1979), pp. 233~261.

기타

<<http://news.chosun.com/svc/news/www/printContent.html?type=>>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209241716412117&type=1&gubn=und...>>

Abstract

A Study on Korean Reunification and
Its External Transaction Cost

Lee, Soo-hyung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Korean reunification poses two distinct yet interdependent conundrums: reunification itself, which is the immediate challenge; and the strategic landscape that emerges from reunification, which has the potential to fundamentally transform strategic relationships in Northeast Asia. The process of Korean reunification essentially brings about questions about the costs of such a reunification. We can divide these costs into two categories: an internal cost which only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an external cost, related to the politics of Northeast Asia.

In this context,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ry to examine the external transaction cost in the process of Korean reunific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external transaction cost. There are three main issues: the general military forces of Korean reunification, the ROK-U.S. alliance and the territory of Korean reunification, and the unsolved problem of the recent history.

Key Words: Korean reunification, external transaction cost, ROK-U.S. alliance, national identity

이수형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안보』, 『국제체제의 변화가 동맹의 유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 『북대서양조약기구와 국제연합안보리와의 역학관계: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을 중심으로』, 『중견국가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노무현정부의 동맹재조정 정책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